

광주·전남 학교 내 친일 잔재 '수두룩'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학교 곳곳에 자리한 친일 잔재 청산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며, 세부조사 등을 거쳐 가능한 3·1만세운동 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인 올해 안에 철거작업까지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1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사업비를 확보한데 이어 최근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가와 교표, 교기, 교목 등 학교상징물은 물론 기념비나 시설 등에 대한

버 학교역사관'에 친일 잔재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고 친일 잔재 기념비와 건축물, 동상 등은 존치시킨 뒤 '다크투어리즘'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에서는 2016년 친일인사 김백일(일본식 이름 가네자와 도시미나미·1917~1951)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백일초의 학교 이름이 성진초로 개명되는 등 학교 내 친일 잔재 지우기 작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져오다 올해 초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의 친일 잔재 조사용역 결과와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근거로 본격화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과 연계해 식민 잔재청산에 속



“아베 정권 규탄”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 1000여명이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 1차 조사 140여개교 317건 신고...9월까지 정밀조사
 전남, 전문가그룹 TF 1차 전수조사 친일 잔재 115건 확인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심는데 계기 됐으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140여 개 학교에서 317건의 친일 잔재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히말라야시대(개일갈나무), 가이즈카 향나무 등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이 상당수에 이르고, 육일승천기를 연상케 하는 학교 깃발, 친일작곡가가 만든 교가, 일본식 기념비 등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일부 사학 법인의 경우 일본식 법인 명칭이 도마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덕고와 대동고 등 일부 학교에선 교가를 이미 교체했고, 몇몇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교목을 소나무나 은행나무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구성된 '친일 잔재 조사 및 청산 TF팀'을 중심으로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진 뒤 11월까지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

도를 내고 있다"며 "세밀한 검증을 거쳐 변경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교육청도 올 상반기 1차 전수조사를 통해 교가와 석물(표지석, 흉상 등), 생활규정 등 친일 잔재 115건을 공식 확인했다.

김동진, 김성태 등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교가가 18개교에 달했고, 33개교에서는 일제총훈탑과 공덕비 등을 모방한 일본식 석물이, 64개 학교에서는 일제시 생활규정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잔재 외에도 일제강점기 흔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본격적인 청산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친일 잔재 청산이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김정환 기자

‘어게인 2016 vs 철새정치’ 평화당 분당에 광주·전남 민심

민주평화당 사망선고, 여당 견제세력 구축해야
 창당 1년6개월만에 당 쪼개는 것은 ‘구태정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등 평화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는 이날 탈당선언을 했다. 실제 탈당은 12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분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호남지역 당원들 사이에서도 당

권과 비당권과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창당 1년6개월 만에 당을 쪼개는 것은 ‘철새정치’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11일 민주평화당 비당권과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에 따르면 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안정치는 현재 민주평화당 지지율 2%대는 사실상 민심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표는 ‘어게인 국민의당 2016’이다. 당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광주·전남지역 18석 중 16석을 차지했다.

총선까지 남은 8개월 동안 민주당을 견제하고 민생정치를 이끌 수 있는 제3지대 대안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야권 지지율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향후 필연적인 야권 정계계편의 흐름을 민주평화당에서 주도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민주평화당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해 온 김명진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장장은 “간판이 없어지면 당장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민주당의 경제 실책을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며 “민주평화당의 실력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건전한 대안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비당권파인 대안정치 의원들의 탈당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광주·전남·전북지역 평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오는 12일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 평당원들은 국민의당에서 쪼개진 민주평화당이 다시 1년6개월 만에 분당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정치’이자 ‘철새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탈당을 결행하는 과정에서 평당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평당원협의회 임동민씨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다시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직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이다”며 “이 같은 정치행태는 민심에 울림이 없다. 더이상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씨는 “당적이 수시로 바뀌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여러 당원들이 상당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며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 당선만을 위해 당을 다시 쪼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